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

2019.3.11.(월) 09:00

모 두 말 씀

2019. 3. 1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1천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10년 넘게 갚지 못한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이 지난 2월말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책 설계와 접수, 심사, 홍보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정성을 쏟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성과>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경제력을 상실한 채 오랜기간 연체로 고통을 겪는 한계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포용적 금융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7.7월 발표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총 349만건의 채무를 소각하였으며,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도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11월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62.7만명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작년 2월에는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하여 심사를 진행한 결과, 58.6만명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일반 금융권 연체자들도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말까지 접수창구를 운영했습니다.

초반에는 접수실적이 다소 저조했지만,
접수 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하고 홍보에 힘쓴 결과
모두 11.7만명이 신청하고,
현재까지 4.1만명의 지원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1만7천이라는 숫자가 적어보일 수도 있지만,
채무자 개개인의 애절한 사연을 들어보거나
과거 신청 방식으로 운영했던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작은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행복기금('13년) : 매입대상채권 345만건 중 25만건만 매입 신청(7.2%)
VS 장기소액연체자 대책 : 신청대상채권 약 40만건 중 11.7만건 신청(29%)

오랫동안 추심의 고통을 피해 움츠려들고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도 갖지 못하고 불편하게 사셨던
한 분 한 분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재기 기회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운영의 소회 및 시사점>

정책당국자로서도 이전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다루는 작업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가 정비되어 왔지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들을 중심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어서 대상자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책을 계기로
앞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편을 통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차주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원금 1500만원 이하 + 연체 10년 이상’인 채무자에 대하여 ①채무원금을 70% 감면하고, ②감면된 채무를 3년 간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 면제

둘째로, 이번 대책은 정책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과 끊임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어렵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분들에게
상실감을 유발하고
‘빚은 갚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접수결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환할 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조차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셋째로, 서민 정책의 전달 과정에서는
취약한 분들과의 최접점에 있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뜻깊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76개 기초자치단체의 통장님과
사회복지사님들로 서포터즈를 운영했는데,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분들까지
직접 찾아뵙고 제도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금융정책을 안내할 때도
이번에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과제 및 맺음말>

이제 접수는 종료되었지만,
아직 심사 및 채무면제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심사를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고,
채무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매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장소연 재단이 최대한 개별매입을 진행하여
한 분이라도 소중한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개인파산이나 신복위 특별감면을 통해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책으로 빛의 굴레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